

지난해 공공 지방의료원 당기순이익 156억원

군산의료원이 61억원으로 수익 가장 많아... 부산·마산·삼척 의료원 40억원대

민주 박완주 의원 "지방의료원이 모두 적자일 것이라는 오해 해소, 의료원 확충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34개(성남의료원 2019년 개원 제외) 지방의료원의 2019년 당기순이익을 합한 결과 156억 3,25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정망 기능뿐 아니라 신종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거점치료병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에 35개의 의료원이 운영 중에 있다.

2019년 당기순이익 산출결과 17개 지방의료원은 흑자, 17개 지방의료원은 적자로 나타났다.

34개 지방의료원의 2019년 당기순이익을 모두 합하면 156억 3,253만원이 나온다.

지방의료원이 적자만 야기시킨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결과다.

2019년 당기순이익이 가장 높은 지방의료원은 군산의료원으로 61억원이었다.

이어 부산의료원 48억, 마산의료원 47억, 삼척의료원 40억, 인천의료원 33억, 원주의료원 33억, 김천의료원 30억, 서귀포의료원 27억, 파주병원 20억, 울진군의료원 16억, 안성병원 12억 등 이천병원, 수원병원, 청주의료원, 목포의료원, 속초의료원, 포항의료원 17개 지방의료원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2019년에 61억 736만원으로 가장 높은 당기순이익을 낸 군산의료원은 413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국비와 지방비로 각각 40억 9,000만원,

지방비로 48억 9,050만원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지자체가 적절히 뒷받침한다면 지방의료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삼척의료원(142병상)과 울진군 의료원(148병상)은 국가와 지방에서 지원받은 액수보다 더 많은 순이익을 내고 있어 공공의료시설로서 그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이 예비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예산 낭

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절차다.

21대 국회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의료원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당기순이익 결과는 지방의료원이 모두 적자일 것이라는 오해와 우려를 해소시킨다"면서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은 10%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2018년 기준)인 것을 감안할 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이 적절한 위치에 충분히 확보돼야 하며,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의정 소식

김이재 도의원 "새만금을 빅데이터 밸리로 구축하자"



새만금을 국가 빅데이터 밸리로 구축하자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은 지난날 SK컨소시엄이 새만금에 2조

원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북도가 지역균형뉴딜과 연계해 새만금을 국가 빅데이터 밸리로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SK컨소시엄이 구축하겠다는 데이터센터는 플랫폼 기업들의 핵심 인프라로,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데, 애플이나 구글 등 글로벌 아티(IT) 기업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수상태양광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새만금은 글로벌 아티(IT)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유리할 뿐 아니라, 저렴하고 넓은 부지를 제공할 수 있어, 빅데이터 밸리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지역균형뉴딜과 SK의 새만금 투자는 전북도가 빅데이터 밸리를 추진하기에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며 "새만금의 구체적인 점진적 목표를 전북도가 정확하게 제시하고, 세계적인 IT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법과 인프라를 정비하는 한편, 빅데이터 밸리에서 일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전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송성환 도의원, 사회적 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농업 생산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교육, 고용, 치료,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은 22일 제376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농산림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전북도 사회적 농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회적 농업 확산과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지역 단위 네트워크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질병관리청-전북대 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

협력 강화 움직임 '본격화'

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 찾아 상호협력 방안 논의
민주 김성주 의원 "국감 지적사항 후속조치 이행 다행"

질병관리청과 전북대 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질병청장에게 높은 수준의 민간 협력을 주문했고, 국감 지적사항에 따른 질병청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향후 두 기관의 협력과 감염병 연구역량에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조하면서 전북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동물실험이 가능한 생물안전차폐시설(ABS-3)이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전북대)와의 공동협력, 시설활용을 촉구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청장은 "감염병 연구를 위해 상호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며 협력 증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고,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이 22일 전북대 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를 방문해 전북도와 전북대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성주 의원은 "질병청 국립감염병연구소 출범은 대한민국 감염병 연구·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이다"며 "게다가 우수한 인력과 장비가 있는 전북대 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와 국립감염병연구소 간 협력강화를 위한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감염병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질병청의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며 "국회에서도 제도과 법령, 예산으로 전북 현안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부하 아니다"

윤석열, 대검찰청 국감서 추미에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환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처럼 답했다.

윤 총장은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

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했다.

또 "과거에는 의견이라고도 하지 않았다. 법무부와 검찰은 인사도 협의하고, 업무에 관한 규칙이나 훈령도 같이 만들었지 대립해 본 적이 없다"며 "저희들도 검찰개혁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다"며 "다만 제가 그걸 수용하고 말 게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법적으로 다루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뉴스1

인국공 직접 고용 탈락 자회사 근로자 보호를

민주 김윤덕 의원 "노·사·전문가협의회 통해 해결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 고용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거부한 자회사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계약과 관련해 의뢰한 2건의 법률자문을 검토한 결과, 왜곡되고 누락된 질의에 대한 한 건의 법률해석을 바탕으로 방재직, 보안검색C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



이에 공사는 다른 B법무법인에 사설을 왜곡·누락해 법률자문을 구했고, 위 근로자들 모두 직고용 채용 절차 완료 시 자회사와의 근로계약도 종료되도록 하는 '한시적인 기한부 계약'이라 하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 인천공항공사는 B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직접 고용절차에서 탈락한 방재직 근로자를 해고했고, 보안검색요원의 채용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전환 대상, 방식 및 시기 등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며 "원칙에 입각한 정규직 전환 추진과 투명한 과정 관리를 위해 컨설팅단 같은 임의기구가 아닌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다시금 이 문제를 다루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수산물 유통단계는 생산자, 수협위원장, 중도매인, 소비지도매시장·수협공판장, 소비지도매인, 소매상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최대 6단계 구조이다.

/유호상 기자

최근 5년간 고등어 산지가격 소비자가격 최대 4배 차이



국내 주요 수산물 유통비용률은 지난해 평균 52%, 납치와 고등어는 70%가 유통비용으로, 소비자가 사 먹는 가격의 절반 이상이 유통비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국내 주요 수산물 유통비용률은 지난해 평균 52%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어와 소비자가격의 차이가 최대 4배 차이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산물의 유통비용이 높은 이유는 수산물 유통경로가 다양하고 단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수산물 유통단계는 생산자, 수협위원장, 중도매인, 소비지도매시장·수협공판장, 소비지도매인, 소매상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최대 6단계 구조이다.

/유호상 기자

9월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 27만5000건에 달해

지난 한해 건수 넘어서

올해 9월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가 이미 작년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9월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은 27만5,000건으로 2019년 27만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위반 법규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2018년 13만 8,000건, 2019년 14만7,000건, 2020년 13만2,000건으로 매년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의 경우 2018년 3만 7,088건에서 2019년 4만7,887건, 2020년 9월까지 5만9,26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2019년 3,403건에서 올해 9월 1만2,077건으로 254% 폭증했고, 세종시는 321건에서 810건으로 152%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울산(4,534건→5,592건), 대전(2,264건→2,868건), 경기남부(3만18,371건→4만6,387건), 부산(1만7,719건→2만 5,410건), 경기북부(1만5,382건→1만 6,574건), 경남(1만770건→1만1,562건), 대구(6,602건→1만6,411건), 경북(7,379건→7,914건), 충북(2,327건→2,735건)도

한병도 의원은 "올해 9월까지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작년 수치를 넘어서는 등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특히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까지도 위협하는 행위라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은 적극적인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기초의회 의정 소식



전주시의회, 자전거도로 현황 파악 위한 '현장라이딩' 추진

전주시의회가 22일 자전거도로 현황 및 불편·개선사항 파악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주요 간선도로인 기린대로에서 현장라이딩을 추진했다.

이날 행사는 강동하 의장과 김원주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기린대로 자전거도로 17킬로미터 구간을 2시간정도 자전거를 타고 돌며 진행했다.

의원들은 전주시공영자전거 '꽃심이'로 라이딩하면서 불편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의원들은 라이딩 후 담당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윤성 기자